

[청구인] ○○○

[피청구인] ○○구청장

[주문] 청구인의 청구를 「기각」 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7. 10. 13. 청구인에게 한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영업정지처분」을 취소한다.

## 이 유

### 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2017. 7. 27.부터 인천광역시 ○○구 ○○○○○로 ○○(○○동, ○○○○○)에서 ‘○○○○○○○○(60.84㎡)’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. 6. 22. 15:30경 이 업소 내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에 소매자 가격 5,000원 이상의 피규어 1개를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경품으로 뽑아 갈 수 있도록 한 행위로 인천○○경찰서에 적발되었다.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7. 8. 22. 청구인에게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3호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17. 10. 13.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(2017. 10. 30. ~ 11. 13.)의 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### 2. 청구인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① 이 오락실을 양수할 때 양도인으로부터 ‘경품지급기준 위반’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으나 상품가액이 크지 않고 오랫동안 경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하여 그 말을 믿었던 점, ② 양도인이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경품 가액은 1만원 정도였고 경품 지급기간이 2일로 비교적 짧기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위법성이 경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양도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 여겨지는 점, ③ 이 업소를 양수할 당시 영

업정지 처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 억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.

### 3. 피청구인 주장

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청구인은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고 ‘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’에 서명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반 정도와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경품지급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1월을 2분의 1만큼 감경한 영업정지 15일로 처분하였기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.

나.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, 청구인의 사정과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.

### 4. 이 건 처분의 위법·부당여부

#### 가. 관계법령
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제35조, 제37조
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 2
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6조 [별표 5]

#### 나. 사실관계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) 청구인은 2017. 7. 27.부터 인천광역시 ○○구 ○○○○○로 ○○(○○동,

○○○○○○)에서 ‘○○○○○○○○(60.84㎡)’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.

2) 이 사건업소 양도인이 2017. 6. 22. 15:30경 이 업소 내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에 소매자 가격 5,000원 이상의 피규어 1개를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경품으로 뽑아 갈 수 있도록 한 행위로 인천○○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인천○○경찰서장은 2017. 8. 21.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.

3) 위 2)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7. 8. 22. 청구인에게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.

4) 위 2)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前 영업주가 2017. 8. 28.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,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상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.

I. 피의자 : ○○○

II. 죄 명 :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위반

III. 주 문 :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.

IV.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

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.

○ 피의사실은 인정된다.

○ 피의자가 게임기에 넣어둔 경품의 가액이 법령이 정한 가액보다 약 8,000원 정도 상회하는 것에 불과한 점,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, 피의자가 본 건 적발 이후 이 사건 게임제공업을 폐업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.

○ 기소를 유예한다.

**범죄사실**

피의자는 인천 ○○구 ○○○○○로 ○○, ○○○호 소재 ‘○○○○ ○○○’을 운영하는 자이다.

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,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경품은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7.6.22. 15:30경 인천 ○○구 ○○○○○로 ○○, ○○○○ ○○○○ 내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에 소매자 가격 5,000원 이상의 피규어(소비자가 13,000원 상당)1개를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경품으로 뽑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.

5) 위 2)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7. 9. 19. 청구인에게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2017. 8. 22. 사전통지 한 처분에서 1/2일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재 사전 통지하였다.

6) 피청구인은 2017. 10. 13.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(2017. 10. 30. ~ 11. 13.)의 행정처분을 하였다.

## 다. 판단

### 1)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,
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·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경품의 종류 등 2.경품의 지급기준에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(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)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[별표 5]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2. 개별기준 라목3)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‘영업정지 1월’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6조(행정처분의 기준 등) [별표 5] I. 일반기준 바목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·군·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2)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,

가)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(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)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, 前 영업주가 2017. 6. 22. 15:30경 이 사건 오락실 내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에 소매자가 13,000원 상당 피규어 1개를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경품으로 뽑아 갈 수 있도록 하다 인천 ○○경찰서에 적발되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인정된다.

나) 청구인이 이 업소를 양수할 당시 영업정지 처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면,

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 ‘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’ (을 제1호증)에 의하면 前 영업주가 2017. 6. 22. 경품지급기준 위반으로 인천○○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, 진행 중인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확인서에 2017. 7. 27. 청구인이 서명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바 영업정지 처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.

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前 영업주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여겨진다는 주장에 대하여는,

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상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를 보면 前 영업주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,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

처분이라 함은 위반행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 
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前 영업주가 면책이 되었다는 의미는  
아니라고 볼 것이다. 따라서 前 영업주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 
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 
볼 수 없다.

아울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  
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 
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  
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(대법원 2003. 9. 2. 선고 2002두5177  
판결 참조)라고 판시하고 있으며, 사업자, 명의자 등 책임자는 반드시 현실적인  
행위자가 아니라도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하는바 청구인이  
前 영업주의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

다)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  
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품 등을 제공하  
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의무를 관련 법령으로 부여받고 있음에도 이를 위  
반하였고,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정도 및 내용을 고려하여 2분의  
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그렇다면 청구인이 다소간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지라도 청소년의 건전한  
보호와 육성이라는 공익상의 가치가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 
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  
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·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.

## 5. 결 론

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

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